

‘대포통장 사기’ 가난한 청년층 파고든다

목포서 대포통장으로 1조원대 범죄수익금 세탁 일당·임대조직 적발 하나당 50만원에 빌려 임대...명의만 빌려줘도 징역 5년 범죄 인식 필요

최근 광주·전남에서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명의를 빌려 만들어 지는 대포통장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청년층에게 고수익과 일자리를 미끼로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 주고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117개를 개설, 보이스피싱·사이

버도박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대포통장을 이용해 세탁된 범죄수익금은 총 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대포통장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자금 세탁 등의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의 필수 매개체가 되고 있다.

금융 범죄 시 타인의 통장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정체를 들켜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빼돌렸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일당은 돈을 빼앗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보복이나 자금회수 압박에 대비해 조직폭력배에게 상납금을 주면서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치밀한 계획을 보였다.

문제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일당의 범죄 대상이 점차 청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장 하나당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을 벌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에게 일명 ‘꿀알바’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통장 대여는 급전이 필요한 때가 아니더라도 취업사기나 무지 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사업주가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월급을 줘야 하니 통장을 달라”고 말하며 범죄에 사용하거나 “대출 시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통장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통장 대여가 범죄인 줄 몰라 지인에게 쉽게 통장을 건네

는 경우도 다반사다.

성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도 본인 명의로 쉽게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카드 대금 등을 갚아야 하는 청년층을 주요 범행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통장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중국 어플 ‘위챗(WeChat)’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매매된다.

경찰은 통장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통장 하나당 5~10만원이었지만 최근 50~100만원선에 거래된다는 것이다.

임대 조직은 사들인 대포통장 하나당 수백만원에 범죄 조직에 넘기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기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높지만 젊은

층은 대여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통장명의자가 소송 당사자가 돼 피해액까지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다.

통장 명의자의 경우 100% 적발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김현길 광주북부경찰서 수사1과장은 “통장대여는 보증을 서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며 “행위 자체는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 관계자는 “대포통장 범죄 예방을 위해선 무조건 의심하고, 통장 매매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타인이 통장을 달라거나 비밀번호 혹은 카드를 달라고 하면 대포통장 범죄부터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11일 오후 광양시 야산에서 생후 이틀 만에 숨져 친모가 매장한 영아의 시신을 찾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6년 전 출산 아들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한 친모 체포

“우유 먹이다 아이 숨 쉬지 않아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어” 진술

경찰이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암매장 한 30대 친모를 긴급체포하고 영아 사체 수색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와 목포경찰청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암매장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였던 A씨는 목포의 산부인과에서 아

들 출산하고 바로 퇴원을 해 친정인 광양에서 아이를 돌보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데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켰는데 숨을 쉬지 않아 친정 집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해도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당시 친정집에는 A씨와 A씨 어머니만 살았는데 아이가 숨졌을 때 ‘A씨 어머니는 직장에 출근해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체유기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암매장지가 특정돼 전남경찰청 과학수사원과 담당 수사관 등 18명으로 발굴단을 꾸려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색을 벌였지만 매장된 사체를 찾지는 못했다.

발굴시 훼손 우려가 있어 암매장지 추정 주변부터 천천히 발굴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전 10시부터 다시 사체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오피스텔 전세금 못내줘” 나주판 ‘빌라왕’

‘갭투자’로 100채 소유한 70대 사기 혐의로 피소

🔍 사건 인사이트

나주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오피스텔 100여 채를 사들인 70대 임대인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7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나주시 빚가람혁신도시에서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임대기간이 만료된 9명의 임대인에게 8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께부터 자본금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일명 ‘갭투자’ 방식으로 빚가람혁신도시 일대에서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구매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지만, 최근 이 일대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보다 비싸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대인들이 지난 5월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9명으로 피해액은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0여채에 달하는 A씨 소유 오피스텔이 모두 임대기 된 만큼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피해자는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비교적 고령인 70대라는 점에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진도군 팀장급 공무원 지역상품권 위조 유통

유가증권위조 혐의 검찰 송치

진도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역 상품권을 위조해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진도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진도군청 팀장급 공무원인 A(54)씨를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진도군청 사무실 내 복사기를 이용해 ‘진도 아리랑 상품권’ 1

만원권 9장을 복사한 뒤 지역 곳곳에서 실제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사용했다.

이같은 사실은 A씨로부터 위조된 상품권을 전해 받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들쭉났다. 당시 직원은 “상품권이 A4용지로 인쇄한 듯 너무 얇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게 “투자를 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져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도군은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달 14일 작위해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